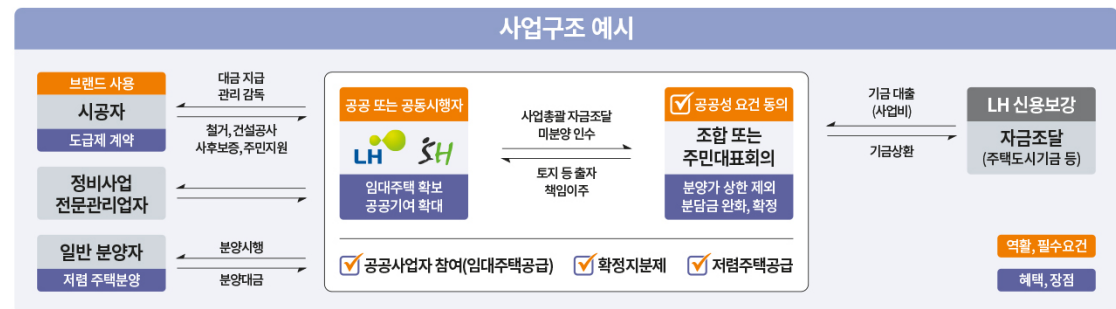


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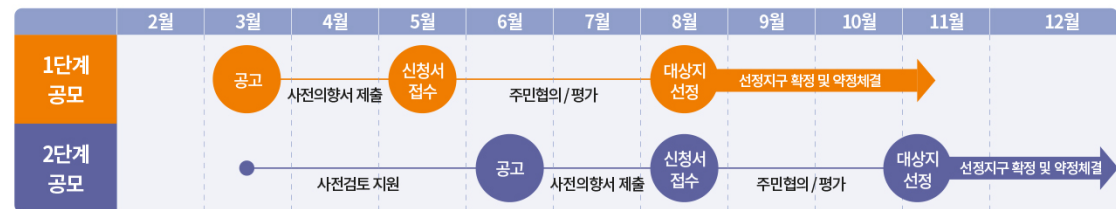
공모개요

- 주민이 공공성 요건에 동의하여 공모신청 시, 평가와 협의를 통해 우선추진 대상지로 선정
- 해당구역의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1단계, 2단계 공모로 구분하여 시행



공모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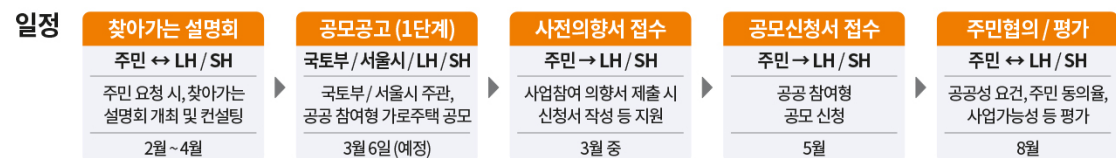
- 공모 관련 설명회 개최**
- 찾아가는 설명회: 주민 요청 시, 1:1 맞춤형 설명회 및 컨설팅 제공 (2월~4월 / 문의 055-922-4252~7)
 - ‘국토부 / 서울시 / LH / SH’ 합동설명회: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2단계 공모 설명회 (5월 예정)



※ 공모와 별도로 LH/SH 상시상담 가능

1단계 공모

대상: 조합설립 또는 주민협의 추진 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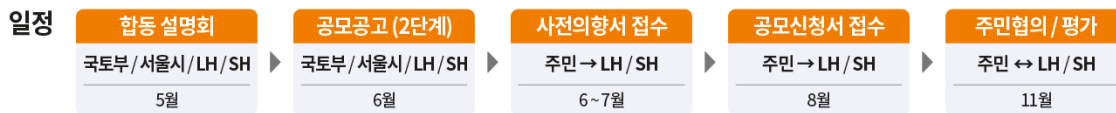


※ 1단계 공모 세부일정은 '20.3.6 이후 공고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	계	준공	착공	사업시행인가	건축심의	조합설립인가	비고 (주민의견 수렴중)
	105	1	9	7	12	27	49

2단계 공모

대상: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곳 중,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모든 곳 (사업시행구역 1만㎡ 미만 / 1~2만㎡ 미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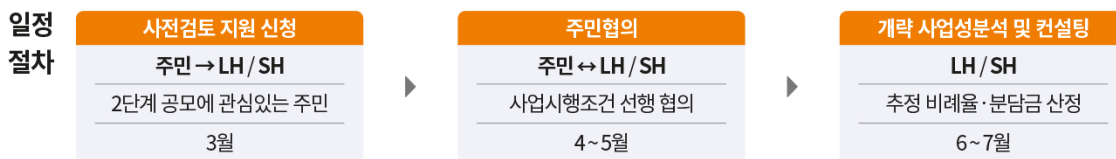


※ 2단계 공모 세부 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공모 참여 활성화 위한 사전검토 지원 (2단계 공모 대상지 한정)

지원대상: 주민동의율 10% 이상의 사업계획 미수립 지구

지원혜택: 사업기본계획 및 추정 사업성분석 등 주민컨설팅



※ 사전검토 방식 및 일정은 기관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공모 문의 및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

LH LH 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 ☎ 055-922-4252~4257

SH SH 도시재생기획처 저층주거지원부 ☎ 02-3410-7346~7351

※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'20.3.6. 이후 국토교통부, 서울시, LH, SH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.

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발행: '20.02)

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2019. 12. 16.)에 따른

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

공모안내



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?

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
추가 부담 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
정비하는 사업

- 대규모 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
- 2018년 2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시행으로 사업절차 간소화, 공공지원 확대 기반 마련



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

가로구역으로서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

1.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㎡ 미만
2. 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/3 이상
3.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(단독 + 공동 혼합 포함) 이상

가로구역이란?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OK!

1 가로구역 면적이 1만㎡ 미만 (단,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 3천㎡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㎡까지 가능 ※ 투기과열지구 제외)

2 도시계획도로 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
※ 광장, 공원, 녹지, 하천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,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

3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

사업시행 범위

해당 가로구역의 ‘전부’ 또는 ‘일부’에서 시행 가능



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‘19. 12. 16.)에 따른

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

추진배경

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‘19. 12. 16.) 중 서울 도심 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
활성화 방안 수립

핵심내용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, 사업면적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지원 강화!

공공성 요건	
사업주체	LH,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 등으로 사업 참여
확정지분제	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으며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→ 공공이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
저렴주택공급	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(최소 10%) 공급
난개발 방지	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1만㎡ 이상 사업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

공공성 요건 충족 시 규제 완화	
1	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 허용 및 사업시행구역 면적 ‘1만㎡ 미만 → 2만㎡ 미만’으로 확대 →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(2020. 1월 입법예고)
2	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→ 주택법 개정 추진 중 (2019. 12월 입법발의)

민간시행사업
(예시)

- 사업시행구역 : 최대 1만㎡
- 분양가상한제 : 적용

공공성 요건충족
사업 (예시)

- 사업시행구역 : 최대 2만㎡
- 분양가상한제 : 제외

VS

- 사업시행구역 2개로 분할 (A, B 각 1만㎡ 미만이어야 함)

- 주민 부담으로 사도 개설 필요

- 1개의 사업구역으로 시행 가능 (최대 2만㎡ 까지 가능)

- 사도 개설 불필요

Plus+

공공임대 20% 이상 공급 시
(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)

용 적 량 : 200% 이하 → 250% 이하
최고층수 : 7층 → 15층

서울시 가로구역 현황 분석

서울 도심 내에서 6m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약 9천여 곳으로 추정
(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)

※ 분석조건 : 가로구역 전체 노후도 / 주택수 / 면적
기준으로 단순 물리적 분석 (정비구역 및 재정비
촉진지구 등 상위계획 수립지역 포함)

범례

- 1만~2만㎡
- 1만㎡미만

0 2 4 6 8 km

Plus+ 공공추진시 사업분석 예시

사업성 분석조건	• 용도지역 : 제2종 일반주거지역 (대지면적 : 7,000㎡ / 토지소유자 : 100 명) • 주택계획 : 59, 74, 84 타입으로 1 : 1 : 1 비율로 추정, 임대주택은 세대수 기준 20% 반영 (44 타입, 행복) • 종전자산 : 실거래가 기준 적용 (해당 구별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'19년 저층주거건축물 실거래가 평균) • 아파트 시세 : 한국감정원 통계자료 (해당 구별 아파트 평균매매가 적용) • 사업비 : 공사단가는 460만원 / 3.3㎡ (연면적기준) • 분담금 분석 : 토지등건축물 가격이 5억원인 주민이 74타입을 분양 받는 경우
---------------------	---

- 토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세대수 상향
- 분양가 상한제 제외에 따른 개발이익 향상으로
주민 부담금 저감

주택 계획 분석 (용적률 200% → 250%)

구분	주민주진	공공추진
전체	138	184
조합주택	100	100
일반주택	38	47
행복주택	0	37

※ 상기 결과값은 추정자료로, 감정평가결과·물가변동·분양가격 등 사업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

• 비례율(%) = (총수입 - 총사업비) ÷ 종전자산총액 • 개별권리가액 = 종전자산액 × 비례율 • 분담금 = 분양가격 - 개별권리가액

01

02

03